2026년 지방정부 혁신 실행계획

2026. 4.

광주광역시

목 차

Ⅰ. 총괄표 ····· 1

Ⅱ. 추진과제 ····· 3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3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 9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 13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21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37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43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48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52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57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61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67

Ⅲ. 소확신 과제 ····· 73

Ⅳ. 정부혁신 확산 방안 ····· 82

Ⅰ. 총괄표

주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 온(ON) 활성화	시민소통과	'26. 1. ~ 12.
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효율화	예산담당관	'26. 1. ~ 12.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1. 인터넷방송 소통영상 프로그램 제작	대변인	'26. 1. ~ 12.
2. 정보공개 청구 업무처리 평가	총무과	'26. 1. ~ 12.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1. 시민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시민소통과	'26. 1. ~ 12.
2. 민관협치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시민소통과	'26. 1. ~ 12.
3.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공감사업 발굴·추진	광주전략추진단	'26. 1. ~ 12.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1.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정책과	'26. 1. ~ 12.
2.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돌봄정책과	'26. 1. ~ 12.
3.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돌봄정책과	'26. 1. ~ 12.
4.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주 기반 조성	외국인주민과	'26. 1. ~ 12.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기본사회 추진 기반 구축	광주전략추진단	'26. 1. ~ 12.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고령사회정책과	'26. 1. ~ 12.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과	'26. 1. ~ 12.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1.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강화	인구정책담당관	'26. 1. ~ 12.
2. 지방시대 실행체계 정립과 내실있는 추진	인구정책담당관	'26. 1. ~ 12.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1. 플랫폼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여성가족과	'26. 1. ~ 12.
2. **[대표과제]**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운영	청년정책과	'26. 1. ~ 12.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1. 조직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	인사정책관	'26. 1. ~ 12.
2.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발굴	혁신평가담당관	'26. 1. ~ 12.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1. 직무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청년 공무원 세계로)	인사정책관	'26. 1. ~ 12.
2. 사내대학 프로그램 활성화	인사정책관	'26. 1. ~ 12.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디지털기반 AI 행정 혁신 강화	데이터정보화담당관	'26. 1. ~ 12.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환경 조성	데이터정보화담당관	'26. 1. ~ 12.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성과평가 추진	데이터정보화담당관	'26. 1. ~ 1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 AI·디지털 시대를 주도 할 행정역량 강화	인재교육원	'26. 1. ~ 12.
2. AI 인재양성 성장사다리 구축	인공지능산업실	'26. 1. ~ 12.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방정부혁신) 과제

1.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기후대기정책과	'26. 1. ~ 12.
2. 시청 결혼식장(빛의 정원) 운영	총무과	'26. 1. ~ 12.
3. 찾아가는 '자녀방 정리' 컨설팅	일가정양립지원본부	'26. 1. ~ 12.
4.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서) 협업체계 구축	안전정책관	'26. 1. ~ 12.

Ⅱ. 추진과제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1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 활성화

주관부서	시민소통과	협조기관/부서	설문조사 요청부서
담당자	소통기획팀	연락처	062-613-6171

□ 추진배경

○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활용

- 종전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활용되던 '바로소통광주'에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상시적 시민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소통채널로 확대·개편

○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정책참여단 가입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공감·토론으로 정책실행 방안 참여

- 광주온(ON) 운영으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부 추진사항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시정 주요현안 등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는 정책결정 및 실행 과정에 활용하며, 정책반영·추진사항 알림 등 시정 참여 피드백 강화

○ 시민제안 창구 운영

-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편사항 및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요건충족(공감50명)시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 제안 처리과정 실시간 공개(부서답변 등)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시민정책참여단 모집

-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조직으로 상시 모집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연간 시민정책참여단 신규 가입자 5,000명 모집
- 온라인 설문조사 1회당 평균 참여인원 5,000명 이상 달성
- 온라인 설문조사 연 20회 이상 실시
- 시민제안 처리완료율 80%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민과의 소통 채널 부족으로 시정참여 기능이 제한되고 정책 체감도가 낮음	• 광주온(ON)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참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소통 활성화에 기여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110백만원

- 신규가입자 및 설문참여자 등 인센티브 지급 50백만원
- 광주온(ON) 운영 및 홍보 18백만원
- 알림톡 링크 전송 등 광주온(ON)운영 통신요금 42백만원

□ 추진체계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설문조사 의뢰	→	설문조사 설계	→	설문조사 실시	→	분석 및 활용
사업부서 → 시민소통과		사업부서, 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		사업부서

○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제안창구 운영

온라인 시민제안	➡	공감(50표↑) *30일 이내 참여 요건 충족시	➡	정책실행 방안 논의 (시민권익위 분과위원회)	➡	제안채택 (정책권고) 심의종료 (미채택시) (시민권익위원회)	➡	정책권고 실행방안 모니터링

□ 추진일정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연중

* 부서 요청 및 이벤트 설문 등 수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결과 정책반영사항 알림 : 연중

○ 시민제안 창구 운영 : 연중

○ 시민 정책참여단 모집 : 연중

□ 홍보계획

○ 언론매체, 기관·단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필요 시

○ 스포츠 경기 및 지역행사 등 현장 오프라인 홍보 : 수시

1-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효율화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담당자	재정관리팀	연락처	062-613-2432

□ 추진배경

○ 시민의 의사를 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예산 全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재원배분의 공정성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형식적 유지·확대가 아닌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규모 설정**

- '26년 참여예산 목표액 50억원 설정('25년 우리시 주민세 징수액 기준)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효율적 공모 추진**

-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시정참여형 사업
- 일자리, 창업지원 등 청년이 희망이 되는 청년참여형 사업
- 주민e참여시스템, 시민광장 '광주온(on)' 연계로 사업발굴 확대

○ **내실있는 제안사업 발굴 및 구체화를 위한 행정 지원체계 강화**

- 제안사업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분과별 위원회 회의 및 운영위원회 수시 운영

○ **시민 참여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참여예산 역량 강화**

- 시민정책참여단, 주민총회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연계
- 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예산교육 실시
- 시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및 의견 수렴(광주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 제안사업의 정책화 및 예산 반영 실효성 제고**
  · '26년 참여예산 목표액 50억원 설정('25년 우리시 주민세 징수액 기준)
  · 전담 컨설팅단 운영으로 제안내용 구체화, 보완 등 1:1 상담지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총회, 운영위, 분과위)

- 예산 全 과정(편성-집행-결산)의 시민 참여 내실화

· 시민소통플랫폼 '광주온(on)' 연계로 사업발굴 및 우수사업 투표 등 시민참여 확대

· 보도자료, SNS, 대중교통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 시민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시민 대상 예산교육 실시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산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선정사업의 적격여부, 소관부서, 예산반영 결과 등 추진결과 공개로 환류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단순 민원성, 중복·일회성 제안 등 검토 과정에서 미선정율 증가 • 공모 단계에 치중된 형식적 시민 참여 체계 • 추진결과 공개 미흡으로 인한 정책 효능감 저하	• 사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정책 발굴 및 반영 실효성 확보 • 편성부터 결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 • 홍보 강화와 추진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정 신뢰도 및 효능감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 통합 추진 : '26. 3.~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6년 소요예산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홍보비 등 70백만원

□ 추진일정

○ '26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6. 3.

○ '26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26. 3. ~ 5.

○ 제안사업 컨설팅 및 부서 검토 : '26. 5. ~ 6.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 '26. 6. ~ 8.

-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 '26. 8.

- 시민투표, 총회 승인 등

○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 ’26. 9. ~ 12.

- 예산편성, 시의회 제출, 예산심의 등

○ 수요자 맞춤형 예산교육 운영 : ’26. 3. ~ 12.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현장점검 : ’26. 9./11.

□ 홍보계획

○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 ’26. 3. ~ 12.

- 언론보도, SNS, 홈페이지, 대중교통, 전광판, 포스터, 리플릿, 市·區 소식지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2-1 인터넷방송 소통영상 프로그램 제작

주관부서	대변인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미디어운영팀	연락처	062-613-3386

□ 추진배경

○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에게 시정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인터넷방송 기능 강화

○ 주요 시정 현안과 행사를 생중계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와 공감이 있는 시정홍보 체계 구축

□ 세부 추진사항

○ 뉴스, 생중계, 정책홍보 영상 등 시민생활 밀착형 영상 콘텐츠 제작

- (오늘광주는) 주요 시정소식, 행사 등 시의성 있는 뉴스를 입체감 있게 영상으로 전달
- (현장생중계) 주요 시정행사, 정책발표, 토론회 등 '헬로광주'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생중계
- (SNS용 숏폼·스팟 등) 주요 시정 현장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1분 내외로 소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온·오프라인 매체에 홍보하기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다양한 소통 영상 프로그램(700건) 제작

○ 기대효과

- 시정 현안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여 대시민 홍보 기능 강화
-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 실시간 생중계와 SNS 확산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력 향상
- 트렌드형 콘텐츠를 통해 참여와 공감이 있는 시정문화 확산

□ '26년 소요예산

○ 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용역사업비: 375백만원

□ 추진일정

○ 시민 생활 밀착형 영상 콘텐츠 제작·송출 : 연중

○ 시민 접근성이 높은 숏폼 콘텐츠 추가 제작 : 연중

2-2 정보공개 청구 업무처리 평가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기록물관리팀	연락처	062-613-2841 / 2842

□ 추진배경

○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 비공개 정보의 최소화 및 법정 기한과 절차를 준수한 정보공개 처리

□ 세부 추진사항

○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비

-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행정정보를 공표주기별로 사전에 적극 공개

  * 광주광역시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www.gwangju.go.kr)

  * 사전정보 현황 : ('24) 808건, ('25) 813건

○ 원문공개율 제고

- 국장급(3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생산율 제고 및 공개 전환

  * 공개장소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원문정보 공개율 : ('24) 63.6%, ('25) 60.3%

○ 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 비공개 정보 : 타 법령, 안보, 재판, 감사, 개인정보, 경영비밀, 투기 정보 등

- 법정 기한(접수일로부터 10일, 1회 연장 가능) 및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25년 현황

- 공개율 : 96.2%, 처리건수 3,557건(전체공개 1,749건, 부분공개 1,673건, 비공개 135건)
- 기한내 처리율 : 처리건수 3,557건, 기한내 처리 3,475건, 20일 초과 82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통합시 광주·전남 사전정보 목록 재정비(전남 641건, 광주 813건)
- 공개 가능한 원문정보 공개 전환
- 정보공개 기한 내 처리율 제고(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로 알권리 제공)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전정보 목록 광주 813 • 원문정보 공개율 60.3% • 정보공개 기한내 처리율 97.7	• 광주·전남 목록 일제정비 • 광주·전남 원문정보 교육 등 공개율 제고 • 정보공개 기한내 처리율 제고(98%)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대　　상 :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례 개정

○ 개정내용 : 광주·전남 정보공개 조례 일원화

○ 개정일정 : ~ ’26. 6월(’26. 7. 1. 출범 이전)

□ ’26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추진일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법제정비　　: ~ ’ 26. 6.

○ 통합특별시 정보공개, 원문정보 등 운영　　: ’ 26. 7. 1. ~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3-1 시민,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시민소통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소통기획팀	연락처	062-613-6173

□ 추진배경

○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틀 마련

○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면 정책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 세부 추진사항

○ **(현장중심)**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등) 대상 고충 파악, 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시민권익보호 및 해결방안 모색

○ **(협치강화)** 근원적 고충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부서와 해결방안 공동모색,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실행력 있는 정책 개선안 도출

○ **(제도개선)** 정책권고를 통한 조속한 정책반영 유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고충청취 및 민원분석		현장방문 (간담회, 답사)		해법 모색 논의 (유관기관·부서)		시민고충 해소 정책권고

○ **(정책과정 내실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제안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방안 모색

시민권익위	➡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권익위	➡	정책권고
특위구성 필요성 검토		시민권익위+외부전문가, 실행방안 논의		심의		시민권익위→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권익위원회 40회 개최(상반기 20, 하반기 20)
- 정책권고안 도출 6건(상반기 3, 하반기 3)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민 고충 및 제안사항을 부서 중심으로 검토·처리함에 따라 시민의견 반영 제한적, 일방향 소통 구조 형성 • 제안 정책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어 정책 수용도 및 체감도 저조	• 시민들의 고충 청취 및 정책 개선방안의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양측의 이해도 제고 등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제안·공감·정책화 과정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로 정책수용도 및 체감도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37백만원(운영수당 30, 운영물품 구입 5, 워크숍 2)

□ 추진일정

○ 시민권익위 전원위원회(분기) 및 분과위원회(수시) 개최 : 연중

□ 홍보계획

○ 광주온(ON) 이용안내 및 방법, 시민권익위 역할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 (홍보내용) 광주온 이용안내, 시민제안 절차, 정책권고 반영사례 등
- (홍보방법) 홍보 이미지(동영상) 제작 후 버스 내부광고 송출, 동 소식지 게재, 정책권고 사항 보도자료 배포 등
- (이 벤 트) 제안 참여자, 요건충족 제안, 제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민참여 이벤트 강화

3-2 민관협치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주관부서	자치행정국 / 시민소통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시민협치팀	연락처	062-613-2311

□ 추진배경

○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책을 발굴·집행·평가하는 제도적 기반 필요

* 시와 민간이 공동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체계 활성화

□ 세부 추진사항

○ 민관협치 위원회 운영체계 정례화 및 내실화

- (분과위원회) 11개 분야별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 (운영위원회) 분과별 제안 의제 공유 및 협의회 안건 조율 (분기별)
- (민관협치협의회) 시정 현안 및 사회적 합의사항 권고 (반기별)

○ 현장 중심의 소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선진지 견학)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위원 역량 강화
- (통합 워크숍)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성과 공유

○ 정책 소통 창구 다변화 및 상시화

- 시민사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한 현장 밀착형 의견 수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량목표) 협의회(3회), 운영위(6회), 11개 분과위(36회) 총 45회
- (참여목표) 협의회 위원 50명, 운영위 15명, 분과위 180명 등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 (결 과 물)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활동 자료집/홍보 책자 발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민·관 간 인식 차이 및 소통 단절 우려 • 행정 주도의 단방향 정책 수립 • 분과별 분절된 논의 구조 • 단순 회의 중심의 위원회	• 일상적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및 갈등 예방 • 민·관 공동 결정 및 집행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 분과 확대를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있는 협치 파트너 양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 시행 : 2020. 7. 6.(광주광역시 조례 제5501호, 2020. 7. 6. 제정)
- 개정 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95,794천원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수당 및 워크숍 등 : 78,500천원

○ 민·관 협치 활성화 지원 등 : 17,294천원

□ 추진체계

◯ 주관 : 시민소통과(시민협치팀)

◯ 협업 : 실·국 및 관련 부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 시민소통과 : 사업 총괄 및 협치 운영관리
- 실·국 : 분과위원회 운영 및 정책 반영
- 시민사회 : 의제 발굴 및 참여 확대
- 전문가 : 정책 자문 및 검증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관협치 협의회
ㅇ분야별 의제발굴 및 정책사업 제안 ㅇ미해결 의제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ㅇ분과별 발굴·제안 의제 공유 ㅇ지역현안 의제 논의 및 협의회 안건 조율 및 조정	ㅇ시정현안 및 지역발전 의제 논의 ㅇ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市에 제안·권고
11개 분과, 180명	**분과위원장 등 15명**	**50명**(위촉직 41, 당연직 9)

□ 추진일정

○ 민관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6. 1 ~ 12.

○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 ‘26. 1 ~ 12.

○ 민관협치협의회 통합 워크숍 개최 : ’26. 10.

○ 민·관 협치 사례 선진지 견학 및 현장 답사 지원 : ‘26. 5. ~ 12.

○ 활동 자료집 및 홍보 책자 발간 : ’26. 12.

□ 홍보계획

○ (매체) 민관협치 활성화 전용 홈페이지 운영, 보도자료 배포

○ (내용) 민관협치 우수 의제 채택 사례, 위원회 활동 현황 등

3-3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공감사업 발굴·추진

주관부서	광주전략추진단	협조기관/부서	공공기관
담당자	광주전략추진단	연락처	062-613-6215

□ 추진배경

○ '24년도 **<시-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25년도 **<1기관-1대표사업>** 발굴로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 노력

○ 지역사회구조 변화와 시민의 공공서비스 기대수준 향상에 따라, '26년에는 **지역 경계**를 넘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품질 제공** 필요

-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를 통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대상)** 27개 공공기관[공사·공단 4, 출연기관 14(남도장학회 제외), 기타기관 9]

○ **(분야)** ①서비스 편의개선, ②수혜자 확대, ③공유·개방 확대, ④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다각화

○ **(선정기준)** 시민체감도 및 필요성, 공공성 및 형평성, 지속성

○ **(추진절차)**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공감사업 확정	▸	사전평가 (설문 및 중간점검)	▸	최종평가 (우수 사업 선정)	▸	성과공유 및 인센티브 지급
'26. 4.		'26. 5. ~ 6.		'26. 12.		'26. 12.~

□ 추진내용

Ⅰ 추진과제 (검토기준)

① 서비스 편의개선

- 처리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를 통한 이용절차 단축
- 시민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
-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 감소 효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
  ex) 공공시설 예약 통합 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② 서비스 영역 확장

- 기존 수혜대상 외 신규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이동취약계층 등)
- 소득 · 연령 · 지역 기준 완화 효과가 있는 사업

  ex) 단순 참여인원 증가가 아닌 제도 개선 등이 수반

③ 보유자원 공유·개방 확대

- 대학 · 스타트업 등과 연계한 청년창업 공간 창출
- 유휴공간 공유 · 장비 개방 · 데이터 개방
- 기관 간 공동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ex)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지원, 공공기관 자투리 공간 활용 사업 등

④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다각화

- 지역사회, 지역기업 등과 협업사업 ※ 용역, 위탁사업 제외
- 광주공공기관-전남공공기관 협업사업

  ex)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제공, 경계지역 공동 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Ⅱ 평가 및 결과활용

○ **(평가)** 시민참여 및 전문가 심의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확보

선호도 평가 (4월)	▸	중간점검 (6월)	▸	최종평가 (12월)
광주ON (온라인 투표)		전략추진단,관리부서 (서면)		심사위원단 등 (경진대회)

○ **(활용)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차년도 경영평가 반영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우수사업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정착
-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 공공서비스 혁신기반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민의 단순참여 유도로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 개별 기관 인프라 이용자 한정	• 찾아가는 교육과 체육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테니스코트 월회원 전자추첨 도입 등 **시민중심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 기관 도서관, 화상회의실, 라운지 등 기관 소유 **시설 대시민 개방**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시민) 광주ON선호도 평가 참여로 **소확신** 시민공감사업 선정

○ (27개 공공기관) 시민공감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 (전략추진단)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공감사업 발굴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공정한 평가 절차 수행

□ 추진일정

○ 평가대상 공감사업 선정(공공기관→시) : '26. 4.

○ 기관별 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중간점검) : '26. 5. ~ 6.

○ 최종평가(우수사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26. 12. ~

□ 홍보계획

○ 광주ON 온라인 투표,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최종평가, 투표결과 및 정책홍보자료를 담은 보도자료 배포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4-1 돌봄의 보편적 권리 확대와 중복 누락 없는 고도화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관부서	돌봄정책과	협조기관/부서	5개 자치구(96개 동)
담당자	통합돌봄팀	연락처	062-613-3241/3242

□ 추진배경

○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 증가**

* 돌봄의 주 대상인 고령인구와 1인가구 급증으로 돌봄수요 지속적인 증가

‣ **(고령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2025. 18.6%)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 (2024. 36.2%)**

* 의료·돌봄 욕구가 급증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크게 증가

‣ **(광주 75세 이상 노인인구 수) 93,096('22.10) 97,675 ('23.10) → 103,093('24.10) → 107,756('25.10)**

○ 2026.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중복·누락 없는 통합연계 전달체계 고도화 필요

* (목적)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연계**

○ 품질 높은 서비스 지원과 **실질적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 연계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

○ 평균수명 연장과 가족돌봄 약화로 생애말기에 대한 관심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지역 돌봄**에 대한 시민적 수요 증가

□ 세부 추진사항

○ 전국 돌봄과 중복·누락없이 통합하여 **고도화된 돌봄체계 운영**

- 광주돌봄을 진입창구(Gateway)로 복지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쓸모를 더하는 심화된 돌봄체계 운영

○ 새로운 틈새 보완을 위한 **서비스 신설, 모니터링 강화**

- 약사의 가정방문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실시 및 연계

* 서비스대상 :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로 복용하는 약 개수가 10개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건강보험공단 의뢰) 및 의료급여 수급자(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약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약물 종복 및 부작용 등 점검,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 **퇴원환자 연계 및 생애 말기 임종케어** 확대

* 병원 → 5개구 간 연계 체계 구축

(요양병원·2/3차병원 등 협약병원 → 구로 퇴원환자 직접 의뢰)

○ 맞춤서비스 연계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제 도입**

- (대상자) **고위험 집중관리군 (돌봄필요도 평가 90점 이상)**
- (모니터링 내용)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제공 만족 여부, 대상자 상태변화, 돌봄계획 변경 여부 등
- (모니터링 결과 반영) 돌봄계획 변경 및 종결 등
- (모니터링 방법) ❶ 가정방문 / 모니터링 서식에 따라 재평가
  ❷ 재평가 결과에 따라 돌봄계획 재수립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지원 확대 100명**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병원** 추진 50개소
- **고위험 대상 정기 모니터링 조사** 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약물 중복·부작용 위험 상존 •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미흡으로 재입원 및 돌봄 공백 발생 • 고위험 대상자 사후관리 체계 미흡으로 서비스 누락 우려	•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약물 안전성 확보 및 건강상태 개선 • 협약병원 기반 퇴원환자 연계 강화로 지역사회 정착 및 일상회복 지원 •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고위험군 선제적 관리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2. 12.)
(조례 개정)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2025.12.10.)

○ (운영지침 개정)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지침 (2026. 1.)

□ '26년 소요예산

○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63억원(시 47.3, 구 15.8)

○ 정보시스템·교육·홍보 등 사업 운영 1.7억원(시)

□ 추진체계

○ 추진원칙 : 공공책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권한 확대(돌봄계획 수립)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광주광주다움 통합돌봄 + 국가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 전달체계(상세)>



○ 수행주체별 주요 역할

- 시 :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총괄 운영, 기반 안정화

(기반 구축) ▲**협업조직** 운영(실무회의·돌봄통합협의체 등), ▲**운영지침** 개정, ▲**돌봄콜**(區 연결)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지원) ▲대시민 공통 **홍보**, ▲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 ▲**사회적 돌봄 이슈 생산** 및 선도

- 구 : 광주⁺돌봄 서비스 지원망 운영, 동 사례관리 지원

(동 사례관리 지원) ▲**돌봄콜** 등 단일 접수창구 운영, ▲**의무방문** 대상자 선정 및 방문현황 관리, ▲동 **사례관리 현황 관리** 및 지원,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광주⁺돌봄 지원망 구축) ▲광주⁺돌봄 서비스 **총괄 계획** 수립, ▲**제공기관** 선정 / 협약 / 교육 / 품질관리 / 평가, ▲**의료돌봄 매니저**의 1:1 **의료매니지먼트**, ▲제공기관에 **서비스 의뢰**, ▲서비스 **비용 정산** 및 지급

- 동 : 돌봄 사례관리 실행 (돌봄필요도 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 연계/의뢰)

(의무방문 / 신청접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의무방문** / 신청 및 의뢰 **접수**

(돌봄계획 수립) 현장방문 및 **돌봄필요도 평가** ⇨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기존돌봄 **연계**(사후관리) ‖ 광주⁺돌봄 **의뢰**(→구)

(평가 및 사후관리) 제공기관 서비스 결과 **평가** ⇨ **사후관리**, 필요시 돌봄계획 재수립

- 공공기관(광주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제공기관(제공인력) 역량 강화 **교육(사전교육·보수교육 등)**, ▲**제공기관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제공기관 운영 **컨설팅**, ▲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제공기관 소통 **간담회**, ▲제공인력 **소진예방 상담 등**

- 민간·공공 제공기관 : 광주⁺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확보) 돌봄 분야는 물론 보건의료, 요식업, 건축, 청소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교육 사전이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및 돌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교육 사전이수

□ 추진일정

○ 가정방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실행** : ’26. 1.~

○ 의료돌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돌봄매니저 운영** : ’26. 1.~

○ **의무방문** 대상자 현장방문 개시 : ’26. 2.~

○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 개최**포럼 : ’26. 2.~

○ 서비스 품질 관리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 운영 : ’26. 2.~

○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위원회** 운영 : ’26. 6./12.

○ **제공기관 간담회** 및 운영편람 개정, 현장 모니터링 : ’26. 7.~

○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원고 모음 : ’26. 9.~11.

○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7년 **운영지침 개정** : ’26. 12.

○ **담당자(행정·민간) 교육**, 시-구 **실무회의** : ’26. 연중.

□ 홍보계획

○ 홍보내용 :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등

○ 홍보방법 및 매체

(직접홍보) 찾아오지 못하는 시민 선제적 의무방문

- 장기요양 1~4등급 노인, 심한 장애인, 청·장년 1인가구 수급자 등 직접 방문 안내
-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렛, 이용자 안내문 등)

(대외협력 홍보) 언론·방송 홍보와 벤치마킹 통한 정책 공유 및 확산

- 보도자료, 인터뷰, 방송촬영 협조 등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 벤치마킹 지원

4-2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주관부처/부서	복지건강국 / 돌봄정책과	협조기관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담당자	복지정책팀	연락처	062-613-3221

□ 추진배경

○ 우리시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 349명(1차), 413명(2차)의 은둔형 외톨이 발굴, 우리 시 1만 2천여명 이상 추정

- 은둔형외톨이 지원 전문기관의 부재로 전문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 미비와 사회적 인식의 부담감으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지내는 악순환 반복

○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청년층의 은둔과 고립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전국 최초 제정('20.7.시행)된「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에 의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지원사업 연차별 추진중

* **('20년)** 실태조사(1차) → **('21년)** 5개년('22~'26) 기본계획 수립→ **('22년)** 지원센터 운영 → **('23년)** 실태조사(2차) → **('24년)** 지원센터 운영 → **('25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운영근거 :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는 '은둔형외톨이'와 그 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7.1.)에 따른 광주·전남 조례 통합 및 지역적 범위 확대 추진 (광주→광주·전남)

○ 주요사업 :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협력, 치유활동, 인력양성 등

- 방문 상담 및 사회활동 지원, 자조모임 및 개별·집단 프로그램 운영
- 협력기관 네트워크 및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 서비스절차

신청·의뢰	⇨	접수면접 (은둔 여부, 정도 파악)	⇨	초기 상담 (기본 12회기)	⇨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가족, 기관 등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센터 內 객원상담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 **(당사자 상담)** (1단계) 문의 및 의뢰(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작성)→(2단계) 접수면접(대면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통한 전문 상담사 매칭(12회기)

- (전문상담 체계관리)

구분	목표	구성요소
초기관리	▸자살 및 자해 안전성 확보 ▸신뢰감 형성	위험수준 판단, 문제 탐색, 보호요인 탐색, 안전 확보, 상담구조화
중기관리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결력 증진 ▸협력적 관계 수립	위험평가 및 개입, 스트레스 관리, 감정 인식 및 행동 변화, 기관 연계 및 자원 활용
후기관리	▸긍정적 자기개념	생활계획 및 관리, 스트레스 대처 방법, 회복탄력성, 종결 다루기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생활습관, 대인관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목적) 질문지 활동을 통한 자기탐구(자기배려, 수용) (내용) 6주간 생활습관개선 목표 수립 및 개인별 목표인증
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	(목적) 소그룹 집단활동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 (내용)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베이킹, 전시, 요리, 교류프로그램 등)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목적) 다른 당사자와 유대관계를 쌓아 긍정적 지지체계 지원 (내용) 당사자, 가족 간 자조모임 지원(별도 프로그램 동시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은둔형외톨이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당사자 발굴, 전문상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단계적·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정도와 유형을 구분하고, 수요자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량 강화**

  • 은둔형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해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지속적 사례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활동 지원 및 재은둔 방지

○ 기대효과

- 은둔 생활로 사회적 역량이 저하된 당사자를 위하여 스스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단계별 지원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역량 강화**
-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상담과 당사자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청년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연계 중심 • 취약계층 위주로 한 회복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중심 은둔기반 당사자 발굴·지원 중심	• 청년·중장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 연계 확대 • 소모임 활동, 가족교육 등 사업 운영 방식 다각화 •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립을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지원

□ ’26년 소요예산

○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 472백만원(시비 430, 후원금 등 42)

- 인건비(5명) 2.8억, 운영비 0.7억, 사업비* 1.2억

* 상담비(12회/1인당), 당사자회복프로그램운영(생활습관개선, 대인관계개선, 사회기술훈련),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친화형 일자리 개발·연계,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

□ 추진체계

○ **(당사자)** 상담신청 → **(지원센터)** 상담 및 지원(관계개선, 사회복귀 지원) → **(연계기관)** 맞춤형 기관(교육, 취업, 주거 등) 연계 → **(자립)** 최종목표

□ 추진일정

○ 2026년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 ’26. 1.

○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 ’26.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례 및 업무 통합 논의 : ’26. 3.~

○ 제3기(’26~’28)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실시 : ’26. 2.~8.

○ 2026년 은둔형외톨이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6. 4.

○ 은둔형외톨이 5개년(2027~2031) 기본계획 수립 : ’26. 8.~12.

○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성과공유회 : ’26. 12.

□ 홍보계획

○ 홍보내용 : 이용안내,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인식개선 활동 등

○ 홍보방법 및 매체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

- (온라인)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홈페이지,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
- (오프라인) 홍보리플릿・포스터, 홍보물품 제작・배포, 언론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은둔형외톨이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

4-3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주관부서	돌봄정책과	협조기관/부서	5개 자치구(96개동)
담당자	생활보장팀	연락처	062-613-3394

□ 추진배경

○ 최근 고유가, 고물가 장기화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가중 및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증가 우려

○ 복지 신청주의, 공공이 주도하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수원 세모녀 사건('22.8월), 신촌 모녀('22.11월)사건, 울주 일가족 사망 사건('26.3월) 등

○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 긴급복지 및 광주형 생활보장제도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세부 추진사항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 구성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사회복지분야 활동가, 생활업종 종사자 등

○ 사업내용

- 5개 자치구별(96개동) 위기가구발굴단 구성·운영*을 통해 외부와 접촉이 없는 1인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 2025년 기준 총 5,906명(동구 786, 서구 1,213, 남구 694, 북구 1,572, 광산구 1,641)

- 발굴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등

* 민간서비스 : 공동모금회, 자치구 후원 연계, 집수리·임대주택 연계 등

❍ 사 업 비 : 비예산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국비보조사업)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시비사업)
▸ 위기사유, 소득.금융재산.일반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생계·의료비 지원대상) . 8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대상)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정부지원)를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생계비·위기사례 지원대상) . 1,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대상) -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6천9백만원_대도시 기준)

* 일반재산(항목별 산정기준), 금융재산(당해연도 생활준비금 등 차감)

○ 사 업 비 : 31,538백만원

- 긴급복지 : 31,038백만원(국비 24,830 시비 3,104, 구비 3,104)
- 노랑호루라기 : 500백만원(시비)

< 2026년 긴급복지 지원 안내 >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1,994,600원], 5인[2,324,400원]
- 연료지원 : 150.000원 **(25년과 동일)** / 주거·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변동 없음
- 주거용재산 한도액 69백만원(대도시) / ('22.7.1.~) 지속 적용

○ 지원현황('25. 12월 기준 / 단위:백만원)

- 긴급복지: 31,696가구 53,639명 28,329 / 예산액 28,708(국 22,967, 지 5,741)
- 노랑호루라기 425가구 579명 496.8 / 예산액 500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 사업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기준 : 3,247천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재산 12억원 이하 & 소득 월 1,084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

○ 총사업비 : 665백만원(시비)

○ '25.지원현황 : 104가구(153명) 621백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공공·민간 협력 기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처리(24,000건)
-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발굴 즉시 긴급복지 및 광주형 생활보장제도 등 위기지원 및 서비스 연계(32,000건, 32,203백만원) *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광주형 기초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위기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적·단편적 지원 중심 • 공공 중심 대응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체계 미흡	• 상시·선제적 발굴체계 구축으로 숨은 위기가구 조기 발견 및 대응, 신속·맞춤형 통합지원 실현 • 공공·민간 협력 강화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형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 ’26. 7월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주요 개정 조항 :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통합(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이 결정하되,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명절·연말 위문금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	**제7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장제비 8. 명절·연말 위문금품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

	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금품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26년 소요예산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 비예산

○ 긴급복지 31,038백만원(국 24,830, 시3,104, 구 3,104) / 노랑호루라기 500백만원(시비)

○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665백만원(시비)

□ 추진체계

○ **(시)**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작·배포, 자치구 간 정보 공유 및 운영방안 내실화 지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현황 관리 및 제출(→복지부)

○ **(구)**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계획 수립, 관리, 홍보 및 현장활동, 자체교육, 참여기관 관리 및 유기적 연계 강화, 운영현황 제출(→시)

○ **(동)**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계획 수립, 모집 및 위촉, 운영관리, 홍보 및 현장활동, 자체교육, 운영현황 제출(→자치구), 발굴가구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위기가구발굴단)** 위기가구 발굴 및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신고 등 조치(동, 119 요청 등)

□ 추진일정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 사업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 ′26. 1.
- ′26년도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제작·배포 : ′26. 2.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현황 점검 : 매월

○ 노랑호루라기지원 추진계획 수립 : ′26. 1.

○ 긴급복지지원 및 광주형 생활보장제도 지원 운영 : ′26. 1.~

○ 위기가구발굴 운영 및 지원 홍보 : ′26. 2.~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1~2차 운영) : ′26. 1.~5.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담당자 협의 : ′26. 수시

□ 홍보계획

○ 홍보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활동,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광주형 생활보장제도) 등

○ 홍보방법 및 매체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

- (온라인) 시 홈페이지,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
- (오프라인) 홍보리플릿·포스터, 홍보물품 제작·배포, 언론홍보 등

4-4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주 기반 조성

주관부서	외국인주민과	협조기관/부서	해당없음
담당자	외국인정책팀	연락처	062-613-1441, 1442

□ 추진배경

○ 202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이행 및 2027년 계획 선제적 수립 필요

○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외국인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외국인 비자 및 정착 지원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 (기존) 1개 대학 60명 → **(확대)** 3개 대학 240명 선발 추천

❍ 외국인주민 맞춤 정책 수립

- 위원회 운영 :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1회) 및 외국인주민협의회(1회) 개최를 통한 정책 심의, 자문 등
- 시행계획 수립 : 2025년 실적 평가 및 2027년도 시행계획 수립(8월-10월)

❍ 인식개선 및 문화 행사 추진

- 행사개최 :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2026년 5월)
- 실태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연구(광주 여성가족재단 협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광역형비자 180명 확보, 위원회 및 협의체 2회 가동 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제한된 비자 쿼터로 지역 인력 수급 한계 • 단편적 정책 수립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창구 부족	• 3개 대학 확대(240명) 쿼터를 통해 맞춤형 정주 경로 확립 • 실태조사 및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 32.6백만원 (시비 32.6백만원)

□ 추진일정

❍ 2026년 제1회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 : ’26. 상반기
❍ 제19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26. 5.
❍ 2026년 9월학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천·제출 : ’26. 8.
❍ 2027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 ’26. 8.~10.
❍ 2026년 제1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 ’26. 10.~12.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5-1 기본사회 추진 기반 구축

주관부서	광주전략추진단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광주전략추진단	연락처	062-613-6211

□ 추진배경

○ **(현 황)**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속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은 불충분하여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

- 누구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 소득, 의료, 주거, 교통, 에너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정부정책)** 국정과제로 채택,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추진**

- 기본사회 **관련법** 제정,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세부 추진사항

○ **(추진방향)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정책 추진**(소득, 돌봄,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4월, 기본사회 관련 논의 등), 법 제정(상반기)

(보건복지부) 「기본사회 기획단」 출범, 소득·돌봄·의료 중심 기본사회 전환 및 과제 발굴

○ **(추진시기) 통합특별시 출범(7.1.) 이후** 조례제정 등 단계적 추진

* 중앙부처 정책방향 및 법 제정 등이 진행 중에 있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본사회 정책 및 조직체계 등을 고려**, 7월 이후 단계적 추진

○ **(추진내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적기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조례 제정**

▸ 현재 **제정중인 법안 및 통합특별법 내용, 타 시도 조례 등을 검토,** 기본사회 조례 제정

▸ 〈~6월〉 조례안 마련, 〈하반기〉절차이행 및 조례제정(시의회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결→공포)

② 추진체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 점검·조정·평가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위원회 구성에 따른 **근거 규정(법, 조례) 마련 후** 구성
- 〈~6월〉 분야별 전문가 파악 등 구성안 사전 준비, 〈하반기〉 위원회 구성

③ 계획수립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확정 : 연구용역 또는 연구원 과제 등**
- 민선 9기 출범 정책방향, 기본사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추진방향 확정
▸ 〈~6월〉 기본사회 기초자료 조사, 〈하반기〉 추진방향 확정 및 추진
- 민선 9기 공약사항, 정부정책 연계, 기존 추진중인 과제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법·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기본사회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기대효과)** 기본사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기틀 마련**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분야별 주요 추진일정** ※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과 협의를 통해 추진

구분	'26. 상반기(~6월)	'26. 하반기(7월~12월)
조례 제정	• **조례안 마련** - 관련법, 특별법, 타시도 조례안 등 검토	• **절차이행 및 조례제정** - 시의회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결→공포
위원회	• **위원회 구성 준비** - 구성분야 및 관련 전문가 조사 등	⇨ • **관련법,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기초자료 사전 조사** - 분야별 기존 추진중인 사업조사 - 정부정책 동향 등 파악	•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향 확정** - 연구용역 등 계획수립 방향 결정 - 예산확보, 절차이행 등 추진

□ 홍보계획

○ 기본사회 관련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행사 등 보도자료 배포 등

5-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주관부서	고령사회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자치구,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담당자	노인시설지원팀	연락처	062-613-3081

□ 추진배경

○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6. 1. 1. ~ 12.31.

○ 사업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 수행기관 : 5개구 19개소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 수행인력 : 1,125명(사회복지사 82명, 생활지원사 1,043명)

○ 사업내용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요 및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퇴원환자, 은둔형・우울 등 취약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6년 : 12,300명)

○ 기대효과

- 취약노인의 안전·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
-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5,819백만원(국비 18,073 시비 7,746)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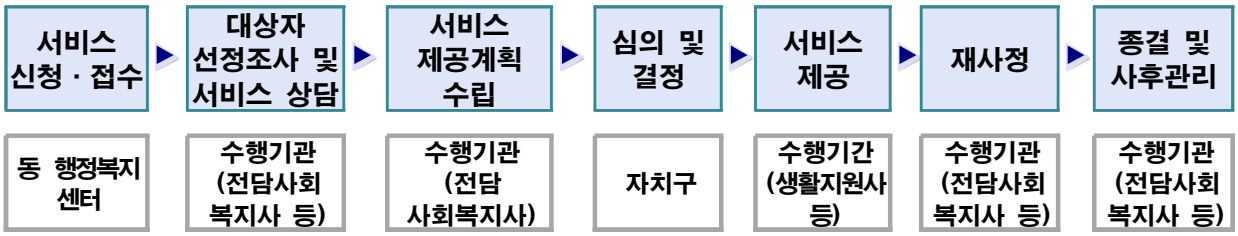
○ (시) 행정·운영 총괄, 예산지원

○ (자치구) 수행기관 선정·운영지원, 관리·감독,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 등

○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지원, 수행인력 교육 및 관리, 컨설팅 등

○ (수행기관)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사업운영 등

□ 추진일정



□ 홍보계획

○ 노인맞춤돌봄사업안내 리플릿 배포(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인식개선 연합캠페인 : 노인존중 문화 확산 및 세대통합 캠페인

5-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주관부서	복지건강국 / 장애인복지과	협조기관/부서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장애인재활지원팀	연락처	062-613-3293

□ 추진배경

○ 도전적행동(자해·타해)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사회문제 발생

-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자살 제주('20.3.), 광주('20.6.), 서울('20.11.)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도전적행동으로 다수의 이용인이 함께 활동하는 서비스 이용 거부 발생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관내 거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 낮 활동 + 주거지원·야간돌봄 지원

* 광주 융합돌봄 시범사업('22.~'24.)의 전국 확대(17개 시도 '24.6월 시행)

-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 시설보강, 전문인력지원으로 낮활동서비스

-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 그룹형 1:1 낮활동서비스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대상자(명)
24시간 개별 일대일지원	12
주간 개별 일대일지원	8
주간 그룹 일대일지원	40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지원 체계 기틀 마련	• 안정적인 돌봄 제공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평범한 일상 지원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6,882백반원(국 4,001 시 2,881)

- (24시간 개별) 3,176백만원, (주간개별) 906백만원, (주간그룹) 2,800백만원

□ 추진체계

○ 관계기관 등 추진체계

구 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주요 정책결정, 국고지원, 지침개발 등
광주광역시	• 자치구 총괄 및 사업시행, 서비스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예산교부
5개 자치구	• 사업 운영관리감독,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이용자 발굴, 기관 지정·관리감독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 사업운영지원, 매뉴얼 개발·배포, 인력교육, 모니터링·평가 등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사업운영지원,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이용자 배치, 교육 등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 지원계획 수립 운영, 사례회의, 이용자 관리 및 가족지원

□ 추진일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개시 : '26. 1. ~

○ 서비스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월1회

○ 관계기관 및 보호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 연중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모니터링 : '26. 3. ~

□ 홍보계획

○ 사업안내 홍보책자 제작(발달센터 등) 및 배부 : '26. 상반기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6-1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강화

주관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조기관/부서	광주광역시/전 실·과
담당자	광역협력팀	연락처	062-613-1731,1732,1733

□ 추진배경

○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상생 및 공동발전 도모를 위해 (지자체 간) 초광역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의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및 추진

- 제14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26. 10. 예정)

○ 영·호남 공동현안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례 협력체계 운영

-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및 신년 교류회('26. 1. 14., 국회박물관)
- 제20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26. 9. 예정)

○ 동·서를 대표하는 광주·대구 양 도시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달빛동맹 운영체계 정비

- 양 도시 대표 민주운동 기념식 상호 참석(대구 2·28, 광주 5·18)
- 달빛동맹 협력과제 체계적 관리 및 이행점검(총 46건)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달빛동맹 구성·운영 방향 개편*

*달빛동맹 발전 지원 조례 개정,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재구성 등

○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반영을 위한 「'26년도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 2026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제출(지방시대위원회)('26. 2.)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광주-타 지자체 간 신규 과제 발굴(4건 이상)
- 광주-타 지자체 간 상생협력 업무 추진(연 2회 이상)
- (지방시대위)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연 1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지자체간 개별 대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심화 및 지역 경쟁력 고갈 • 지자체 간 행정 장벽으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입 및 협력 네트워크 부재	• 초광역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시너지 창출 및 상생 협력 기반 마련 •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무는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효율적 예산 배분

□ '26년 소요예산

○ 총 사업비 7,515천 원(회의용 자료 발간 및 운영수당 등)

- 광주・전남 상생발전 : 2,580천 원
- 광주・대구 달빛동맹 : 750천 원
- 초광역 업무추진 : 4,185천 원

□ 추진체계

시도명	추진체계	협력사항
❶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정책협의회 (메가시티경제동맹)	• 5개 조항, 4개 우선추진사업 (재생E 생산·소비 협력체계 구축, 달빛철도 건설 조기 착공, 호남고속선 직선화 등)
❷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 5대 분야, 37개 과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등)
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 공동 8개, 균형 8개 과제 (재생E 생산·소비 협력체계 구축, 달빛철도 건설 조기 착공, 호남고속선 직선화 등)

시도명	추진체계	협력사항
❹ 타 지자체	(대구) 달빛동맹 및 달빛산업동맹	• 달빛동맹 5대 분야, 35개 과제(군공항 조기 이전, 달빛철도 조속 건설 등) • 달빛산업동맹 5대 과제(달빛철도 조속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경기) 상생발전 합의	• 8개 과제 (AI 생태계 활성화, 미래자동차 경쟁력 강화, 청소년·청년위원회 교류, 관광브랜딩 등)
	(제주) 상생업무 협약	• 6개 과제 (제주4·3-광주5·18 교류 활성화, 국가트라우마센터 공동대응,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 연대 등)
	(인접시군*) 상생발전 업무협약	• 23개 과제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공동협력, 광주3순환 고속도로 조기 완공, 영산강 유역 문화관광 브랜딩화 등)

* 인접시군: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영광

<그간 추진상황>

❶ **(지방소멸 및 재정위기 극복)** 호남권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2036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기원 및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협약('25.3.23)

❷ **(광주·전남 공동발전 도모)**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족
- 발족 및 운영('14.10~'22.7./총12회), 제13회 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 개최('24.6.26.)

❸ **(영·호남 소통·화합)**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정기적 운영
- 발족 및 운영('98.~/매년 1회),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24.9./서울), 성과보고 및 성명서 채택('25.5./창원)

❹ **(타지자체 상생협약 등)** 대구, 경기 등 타 지자체와 협약 추진
- (대구) 달빛동맹·예타면제 협약('22.11./'23.4.), 남부거대권 조성 협약·실무협의('24.2./'24.4.)
- (경기) 상생발전 합의·간담회('23.5./'24.5.) / (제주) 상생업무 협약('24.5.)
- (인접 시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상생회의('24.5.)

□ 추진일정

○ '26년 광주・전남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 '26. 2.

○ 광주$^{5·18}$·대구$^{2·28}$ 민주운동 기념식 연계 실무회의 개최 : '26. 2. ~ 5.

○ 「제20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추진 : '26. 9.

○ 광주-타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상생협력회의 개최 : '26. 8.~12.

□ 홍보계획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6-2 지방시대 실행체계 정립과 내실있는 추진

주관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조기관/부서	사업 추진부서
담당자	균형발전팀	연락처	062-613-1741

□ 추진배경

○ 지역 주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실행체계를 내실화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정합성 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추진체계 구현

□ 세부 추진사항

○ **(2026년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 **(근 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성 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이자, 광주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 **(내 용)** '성장과 집중·연결과 확산·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174개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행기반 마련

○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 **(근 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15조
- **(대 상)** 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예산규모 등)
- **(내 용)** 성과계획 수립→사업 추진→평가→예산 조정의 환류체계를 통한 균형발전사업 실효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지역균형발전 실행체계 내실화)**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제고

- (**미래 신산업 중심의 성장체제 구축**) AI·미래차·반도체 산업 육성, 산학연 혁신거점 강화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일자리 확충
- (**광주 중심 생활권·경제권 연계 확대**) 광주·전남 통합생활권 구축, 교통·돌봄·문화 인프라 확산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기반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중앙 정책과 지역 사업 간 연계 미흡 • 사업별 개별 추진으로 성과관리 분산	•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광주 시행계획 간 정책 정합성 확보 • 시행계획-성과평가-환류 통합체계 운영

□ '26년 소요예산: 비예산산업

□ 추진체계

○ (**협력체계 운영**)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중앙·광주), 자치구, 관련 부서 간 상시적 소통·협력

○ (**역할 분담**) 市(사업 집행·자체평가), 광주 지방시대위(정책 자문·조정), 중앙 지방시대위(정책 지원·성과 점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026년 광주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 '26. 2.

○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계획 수립 : '26. 5.

○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 '26. 12.

○ 지방시대 시행계획 사업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 연중

□ 홍보계획

○ 주요 사업 추진성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체감도 제고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7-1 플랫폼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주관부서	여성정책과	협조기관/부서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팀
담당자	출생지원팀	연락처	062-613-2281

□ 추진배경

○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중이며, 출생아 수가 '25년 4년만에 증가세(전년대비 7.8%)*로 전환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전국(0.80명) 대비 광주(0.76명)으로 0.04명 낮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25년 인구동향조사('26.2.25.) 발표

□ 세부 추진사항

○ 맞춤형 원스톱 통합 돌봄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 맞춤형 온·오프라인 정보 상담·제공 및 AI 기반 챗봇 운영
- 생애주기별(임신·출산·돌봄) 관련 지원정책 및 맞춤형 정보 검색
- 플랫폼 참여를 통한 임신·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안내 및 대시민 홍보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안내 및 카드뉴스, 시책 등 메시지 발송
-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임산부 등 시책 및 플랫폼 홍보
- 신규 회원가입 유도 등 출생축하 '아이키움 GIFT박스' 제공

○ 성평등 관점의 육아 가치관 확산 콘텐츠 개발
- 임신·출산·돌봄 관련 정부정책 및 성평등 육아정보 등 카드뉴스 안내
- 남성 육아참여 사업 활성화(아빠 육아골든벨(6월), 아빠 힐링캠프(10월))
- 임신·출산·돌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신규 회원가입 수 : 2,200명
- 광주아이키움 시민참여 이벤트 : 5회
- 생애주기별 정책 온·오프라인 상담 : 1,400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플랫폼 6년차로 신규유입이 제한적이고 가입흐름이 정체 • 개인별 임신·육아 상담의 한계와 체감 문제 발생	• 마케팅 다채널 홍보 및 이벤트 추진으로 신규 회원가입 증가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개인의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접점 강화

□ 관련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필요한 시책 강구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제26조(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시민이 일·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

□ '26년 소요예산

○ 예산액 : 235백만원(시비)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운영비

□ 추진체계

○ (광주광역시) 광주아이키움 2.0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아이키움(통합돌봄 플랫폼) 운영

□ 추진일정

○ 2026년「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추진과제 정비 : '26.2.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 '26.4.~11.
- 도전 아빠 골든벨('26.6월), 아빠 힐링캠프('26.10월), 온라인(분기별)

○ 주요 플랫폼 홍보물 게시(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등) : '26.연중
- 각종 플랫폼(청년정책, 복지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온·오프라인 맞춤형 상담 : '26.연중

○ 각종 계기성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 '26.연중
- 양성평등 주간, 광주여성 잡페스타 등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 홍보계획

○ 광주아이키움 블로그 및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운영

○ 맘카페 내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홍보 , 홍보물품 및 보도자료 배부

○ 신규회원 가입을 위한 출생 축하 '아이키움 GIFT박스' 제공

○ 자치구, 돌봄기관, 기업, 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홍보활동 추진

7-2 [대표과제]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운영

주관부처/부서	교육청년국 / 청년정책과	협조기관	
담당자	청년정책팀	연락처	062-613-2713

□ 추진배경

○ 광주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청년정책 검색·신청·관리 등 원스톱·원사이트 정책 참여 환경 조성

○ 광주·전남 행정통합('26. 7. 1.)에 따라 양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스템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 사업내용

① 시·자치구 청년정책 통합 관리 및 정책정보 안내

- 중앙부처·시·자치구·유관기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제공
- AI 맞춤형 서비스, 각종 청년정책 안내·신청 창구 운영
- 광주 청년활동가 프로필 등록, 활동 공유, 댓글 소통 등 참여형 거점 플랫폼 조성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발송

② 광주·전남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추진

-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남 청년정책을 통합하여 검색·신청·상담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남 청년정책을 광주 플랫폼에 맞게 분류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 추진방법 : 직접수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플랫폼 내 정책정보 제공 건수 : 200건 이상
- 청년정책 알림서비스 발송 건수 : 30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청년정책 정보의 분산)** 중앙부처·타 지자체 광주 정책이 분산되어 접근성 한계 • **(소통 창구 부재)** 청년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능 부족	• **(광주·전남 통합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청년 정책 검색·신청·상담까지 **광역 원스톱 서비스** 추진 • **(청년활동가 서비스)** 광주 청년활동가 프로필 등록, 활동 공유, 댓글 소통 등 참여형 거점 플랫폼 조성

□ '26년 소요예산

○ 34,687천원 (시비 100%)

□ 추진체계

○ 플랫폼 관리 및 이용 홍보·안내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 홍보 및 사업 관리 : 관련부서, 자치구, 수행기관 등

○ 광주·전남 청년플랫폼 통합 : 광주시 청년정책과, 전남도 청년희망과, 전라남도 청년센터

□ 추진일정

○ 플랫폼 내 청년활동가 서비스 개시 : '26. 1. ~

○ 플랫폼 통합 대비 광주·전남 실무자 회의 : '26. 4. ~ 5.

○ 광주·전남 청년플랫폼 통합 세부시행 마련 : '26. 4. ~ 5.

○ 전남 청년정책·서비스·운영현황 등 사전조사 : '26. 5. ~ 6.

○ 광주·전남 청년플랫폼 통합 개편 : '26. 7. ~ 9.

- 디자인 수정, 주소체계 개편, 사이트맵 보완 등

○ 통합플랫폼 시범 운영 : '26. 10. ~ 12.

- 전남 청년센터 누리집 기존 기능 유지(~'26. 12.)

○ 플랫폼 정식 오픈 및 '27년 유지관리 용역계약 : '27. 1. ~

□ 홍보계획

○ 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주요행사 추진 시 플랫폼 홍보

○ 플랫폼 인지도 향상 및 이용자 방문 유도를 위한 이벤트 추진

○ 청년정책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한 플랫폼 사용자 유입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8-1 조직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

주관부서	인사정책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인사운영팀	연락처	062-613-6277

□ 추진배경

○ 전보가 잦고 격무 등으로 기피하는 업무, 복합 · 고질민원 응대, 해결이 곤란한 민원이 빈번하고, 민원과의 마찰이 상시로 발생하지만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인사 인센티브 부여

□ 세부 추진사항

○ (대상직급) 5급(팀장급) 이하 행정, 기술, 관리운영, 연구 · 지도직

※ '20년부터 5급(팀장급) 까지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로 업무 지속성 강화

○ (지정현황) 9개 부서, 13개 업무, 55명 ※ 2년 단위 재지정

※ '15년(4개 부서, 5개 업무, 20명) ⇨ '17년(7개 부서, 8개 업무, 29명) ⇨ '20년(11개 부서, 18개 업무, 54명) ⇨ '22년(8개 부서, 12개 업무, 42명)⇨ '24년(9개 부서, 13개 업무, 55명)

○ (인센티브)

- 실적가점 : 1년 경과 후 최초 담당일로부터 매월 0.1점(최대 2.4점)
- 수당지급 : 중요직무급 대상자로 당연 선정되어 매월 10~15만원 지급

※ 월 급여시 지급(회계과)

- 전 보 등 :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본인 희망전보, 장기교육 등 혜택부여

○ (총량제 설정) 내부행정(기획 · 인사 · 감사 등) 기능이 주된 부서를 제외한 민원관련 총 215개 부서를 기준으로 격무 · 기피업무 총량범위 설정

- 총량범위 : 4 ~ 8%(9개 ~ 17개 업무) 내 선정 → '24년 6%, 13개 업무

○ (추진체계)

실·국 추천	⇨	직원 배심원단 평가	⇨	직원 의견 수렴	⇨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격무·기피업무 지정
실·국선정위원회 자체심의를 거쳐 추천		직원배심원단 평가 (신청부서 발표)		행정포털 공지 설문조사(7일간)		실·국장 선정		격무·기피업무 최종 선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복합·고질 민원 등 업무 시기적 트랜드 반영하여 2년 단위 재정비 ('24년 선정 → '26년 재정비)

○ 기대효과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로 기피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장기 근무유도

□ '26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특수직무수당(중요직무급) 회계과 지급

□ 추진일정

○ 격무기피 업무 실국추천 : '26.5.

○ 직원의견 수렴 및 평가 : '26.6.

○ 격무기피 업무 재선정 : '26.7.

8-2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발굴

주관부서	혁신평가담당관	협조기관/부서	인사정책관
담당자	혁신기획팀	연락처	062-613-1411

□ 추진배경

○ 시민의 이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으로 다양한 변화와 혁신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우수사례)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市 적극행정 운영조례, 2025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선발일시/규모) 상·하반기 각 우수사례 5건

○ (추진과정) 부서추천→실적검증→예선심사→본선심사(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 실적검증 : 사례 실적 검증 및 제외 대상 확인(혁신평가담당관, 인사정책관, 감사위원회)
- 예선심사 : 주민모니터링단 심사30% + 적극행정추진단 담당사무관 심사70%
- 본선심사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심사, 사례별 5분 이내 발표·질의응답

○ (인센티브) 우수공무원 시장상 표창 및 인사인센티브, 우수사례 소관부서 포상금(상생카드) 지급

- 인사 인센티브 : 등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개인의사 반영 노력) 부여

※ 우대등급별 인센티브 부여기준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우대등급 / 구분	① 특별승진	② 특별승급	③ 성과급 최고등급	④ 산업시찰 (기관자체)	⑤ 실적가점	⑥ 전문직위 전문관 우선선발	⑦교육훈련 우선선발	⑧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⑨ 근속승진 기간단축	⑩ 포상휴가	⑪ 희망전보	
							장기/국외	단기/국내				
	5급이하	6급이하	5급이하	모든직급	5급이하	5급이하	5급이하		4급이하	7급이하	전직원	4급이하
최우수	○	○	○	○	○ (1.0점 이내)	○	○					
우 수		○	○	○	○ (0.7점 이내)	○	○					
장 려					○ (0.5점 이내)	○		○	○	○	○	○

- 포상금 :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25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상)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상한 직원**
- (기준) **적극행정 성과와 노력도, 인사운영 요건 및 대상자 희망 등을 고려하여 등급부여 기준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 (유형) **파격적 인사상 인센티브,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① (파격)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근평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장기/국외), 산업시찰, 전문직위 전문관 우선선발
  ② (기타) 교육훈련 우선선발(단기/국내),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 (목표) 파격적 인센티브 50%, 기타 인센티브 50%

※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18명 선정, 선정된 공무원 중 15명(83.3%)에게 파격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최고등급 1, 특별승급 2, 실적가점 12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와 도전적 업무 수행 저조 • 인센티브 부족과 책임부담 우려로 인해 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가 지속	• 높은 성과에 따른 보상은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신뢰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인센티브 확대·강화로 성과보상 체계 확립 및 적극행정 유인

□ '26년 소요예산

○ 적극행정 포상금 : 500백만원

- (상·하반기)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25만원

□ 추진체계(선정절차)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예선]입상사례 5개 선정, [본선]우대등급 결정

사례접수	예 선		본 선
사례제출 ▶	1차 실적검증 ▶	2차 예선심사 ▶	본선심사
부서추천 시민추천	사례 실적 검증 및 제외 대상 확인	실무심사(70%) 및 주민모니터링단(30%) 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인센티브 부여 절차

적극행정위원회	→	인사정책관	→	인사정책관	→	혁신평가담당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등급 결정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 및 희망의사 확인		인사상 인센티브 결정·부여		인센티브 부여 결과점검

□ 추진일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계획 및 통보 : ’26. 6./11.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 : ‘26. 6./11.

○ 적극행정 실적검증 및 예선 심사 : ‘26. 6./11.

○ 적극행정위원회 본선 심사 : ‘26. 7./12.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확산 : 선정 후

-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홍보계획

○ **(다양한 홍보 채널)** 市 홈페이지, 적극행정ON(온), 모두의 광주*, 광주광역시 블로그, 행정포털,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적극행정 콘텐츠 활용 홍보

*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채널(인스타그램 등)과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광주시 온라인 홍보플랫폼

○ **(콘텐츠 다양화)** 카드뉴스, 웹툰, 웹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극행정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 홍보 및 성과 안내

-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기획보도 등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홍보·확산
- 우수사례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라디오 인터뷰로 적극행정 사례 홍보·확산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9-1 직무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청년 공무원 세계로)

주관부서	인사정책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역량개발팀	연락처	062-613-6291

□ 추진배경

○ 해외 선진정책 및 사례 체험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 주요 시정·핵심 과제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유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세부 추진사항

○ 훈련인원 : 10명 내외(2인 1팀)

○ 훈련기간 : 1개월

○ 훈련과제 : 민선8기 시정과제, 2026년 시정방향[포용·성장·활력], 소속 실·국 주요 업무 등과 부합하는 훈련과제

○ 훈련국가 : 자율 결정(2개국 이내)

- 훈련과제 관련 우수정책·사례가 있는 해외기관(기구), 정책현장 등
- 외교부 국가별 안전정보 위험국가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 국가 제외

○ 훈련방법 : 프로그램 자율 기획 후, 해외 선진사례 체험·학습

- 국제회의, 세미나, 산업박람회, 현장 방문 등 연계
-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소 및 교육기관 운영프로그램 참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우리시 주요 시정 및 현안 과제 등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우수 시책 발굴 등을 통해 정책 활용성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해외 정책 경험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 기회 부족 •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 기획·추진 역량 발휘에 한계	• 해외 선진사례 학습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정책 대응 역량 강화 • 창의적·유연한 정책 기획 역량 향상으로 시정 추진 경쟁력 제고

□ '26년 소요예산

○ 국외훈련비 : 35백만원

- 1인당 300~400만원 대륙별 차등* 지원

* 아시아 300만원, 오세아니아 350만원, 미주·유럽 400만원

□ 추진체계

운영계획 안내 (인사정책관)	⇨	신청 접수 (인사정책관)	⇨	심사·선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	선발 통보 (인사정책관)
'26. 2월		'26. 2월		'26. 3월		'26. 3월

⇨	공무국외출장 허가 (국제교류담당관)	⇨	훈련실시 (훈련생)	⇨	결과보고서 제출 (훈련생→인사정책관)	⇨	성과보고회 개최 (인사정책관)
	훈련일정별		'26. 4.~10월		귀국 후 20일 이내		'26. 10월

□ 추진일정

○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 '26. 2.

○ 훈련 신청·접수 : '26. 2.

○ 심사·심의 및 선발 결과 통보 : '26. 3.

○ 팀별 훈련 추진 : '26. 4.~10.

○ 성과공유회 개최 : '26. 12.

9-2 사내대학 프로그램 활성화

주관부서	인사정책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역량개발팀	연락처	062-613-6292

□ 추진배경

○ 부서별 업무 및 조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조직 내 자율적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업무 전문성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운영방법 : 실·국 또는 부서 단위 자율 운영

○ 선정규모 : 5개 프로그램 내외(프로그램당 강의 3~4개 구성)

- 주제: 시정현안, 직무전문, 조직문화 개선 등
- 강사: 분야별 전문강사 및 교수, 중앙부처 실무자, 퇴직공무원 등

○ 지원내용 : 상시학습 인정, 강사비 지급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부서 자율적 교육 운영을 통한 수요 맞춤형 학습체계 구축
- 직무 중심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업무 전문성 및 실무 역량 향상
- 학습-업무 연계한 자율적 학습문화 정착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획일적·공급자 중심 교육 운영으로 부서별 특성 및 실무 수요 반영 한계 • 교육과 실제 업무 간 연계 부족으로 현업 활용도 저조	• 부서별 직무·현안 중심 교육 운영으로 실질적 업무역량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 • 자율적 교육 기획·참여 확대로 전 직원 학습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 ’26년 소요예산

○ 사내대학 강사수당: 14.4백만원

□ 추진체계

사내대학 운영 계획수립 및 안내	⇨	사내대학 강의 개설 신청 및 승인	⇨	사내대학 운영 및 결과 제출 등	⇨	사내대학 사후 관리 (상시학습, 강사수당 지급 등)
’26. 3월 / 8월		’26. 3월 / 8월		’26. 4월 ~ 6월 / ’26. 9월 ~ 11월		’26. 7월 / 12월

□ 추진일정

○ 사내대학 운영계획 안내 : ’26. 3. / 8.

○ 사내대학 개설 신청 접수 : ’26. 3. / 8.

○ 사내대학 개설 승인 : ’26. 4. / 9.

○ 사내대학 운영 : ’26. 4. ~ 6. / 9. ~ 11.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1 디지털기반 AI 행정 혁신 강화

주관부처/부서	기획조정실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	-
담당자	디지털전환팀	연락처	062-613-2611/2615

□ 추진배경

○ **(디지털 사회)** 정보화→모바일→디지털 심화, 새로운 패러다임 직면
인공지능의 일상화, 빅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달

○ **(정부정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의 지능화·최적화 촉진

○ **(행정혁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AI행정 개발TF 운영**

- 운영내용: 업무 과정에 필요한 AI서비스 자체 개발 및 보급
- 운영기간: ’26. 1월 ~ 12월
- 지원 서비스: 바이브코딩 등으로 구현 가능한 다수 서비스
- 개발 서비스: AI여비몬, 이수모아, 수신착, AI 카드뉴스 등
  * AI 실험실 내 서비스 게시 및 전직원 활용 안내 및 독려

○ **전직원 AI 이용료 지원**(시범운영) 및 **생성형AI 활용 교육**(연 2회)

- 지원대상: 전 직원
- 주요내용: 생성형 AI서비스(챗GPT, 제미나이 등) 이용 지원 및 생성형AI 활용 교육 실시(대면, 실습)
- 지원방법: 행정포털 SSO 연계 서비스 지원 및 상·하반기 교육 진행

○ **업무자동화(RPA) 적용 및 확산**

- 운영기간: ’26. 1. ~ ’26. 12.
- 주요내용: 단순·반복 정형업무 대상 업무자동화 수요 파악(전부서) 과제별 자동화 필요성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 추진일정: 업무자동화 과제발굴(4~5월) → 프로그램 개발(7~8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자체개발 AI 서비스 배포(2건 이상)
- AI 이용료 지원, 생성형 AI 활용 교육(2회)
- 업무개선 효과가 예상되는 RPA 신규과제 발굴(2건 이내)

○ 기대효과

- **(기반 마련)**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한 광주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시대 본격 준비 기반 마련
- **(역량 강화)**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정착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문화 혁신
- **(행정 효율)** 자동화 도입을 통해 절감된 시간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및 정책개발에 집중함으로써 행정 효율 제고

□ ’26년 소요예산

○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	: 21,600천원
○ 생성형 AI 활용 교육	: 2,000천원
○ 업무자동화 운영	: 35,000천원

□ 추진일정

○ 업무자동화 수요조사 실시 및 과제발굴	: ’26. 4.
○ 자동화 과제 업무분석 및 적합성 검증	: ’26. 5.
○ 상반기 AI 이용료 지원 및 AI 활용 교육	: ’26. 5.~6.
○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	: ’26. 6.~9.
○ 하반기 AI 이용료 지원 및 AI 활용 교육	: ’26. 8.~12.
○ 자동화 프로그램 업무적용 및 효과 분석 등	: ’26. 10.~12.

10-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환경 조성

주관부서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데이터정책팀	연락처	062-613-1431, 1433

□ 추진배경

○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 공급자 중심 데이터 개방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데이터기반행정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 (근거)「공공데이터법」제8조 및「데이터기반행정법」제7조
- (내용) '25년 주요 실적 및 성과, '26년도 분야별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표준화, 활용, 기반 / 데이터기반행정: 분석·활용, 공유, 역량·문화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른 수요 맞춤형 신규 데이터 개방

- (기간) 2026. 1. ~ 12.(연중)
- (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접수 및 제공 여부 심의(보유 부서)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 (기간/방법) 2026. 9월 중 /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파악하여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에 반영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 (내용) 데이터셋(14만여건),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 광주통계, 공유데이터, 통신사(SKT), 카드(신한) 데이터 포함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기간/대상) 2026. 7월중 / 전직원 대상(100명 이상)
- (방법)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온라인 진단도구(DATACAPA) 활용,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 전직원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 (기간/대상) 2026. 1. ~ 12.(연중) / 시·자치구 공무원 등
- (방법) 市 인재교육원 연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 (내용) 데이터 기획·분석·활용 등 데이터기반행정 전 분야
  * 집합교육 12개 과정, 사이버교육 19개 과정 개설·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수요자 중심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으로 데이터 활용도 향상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통한 취약 분야 개선계획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인식 개선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경험 및 직관에 의존한 정책 결정 • 공급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 조직 내 데이터 활용 인식 부족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 수요자 중심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 조직 내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 '26년 소요예산

○ 공공빅데이터 활용 교육 강사수당 : 3,500천원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 190,880천원

□ 추진일정

○ '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수립 : 2월

○ 내부직원 대상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추진 : 7월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 9월

○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교육 : 연중

10-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성과평가 추진

주관부서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데이터분석팀	연락처	062-613-2785, 2783, 2784, 2786

□ 추진배경

○ 시정현안, 지역사회 이슈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합리적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필요

○ 기존 평가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부서가 공감할 수 있는 범용적 지표 마련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의 일상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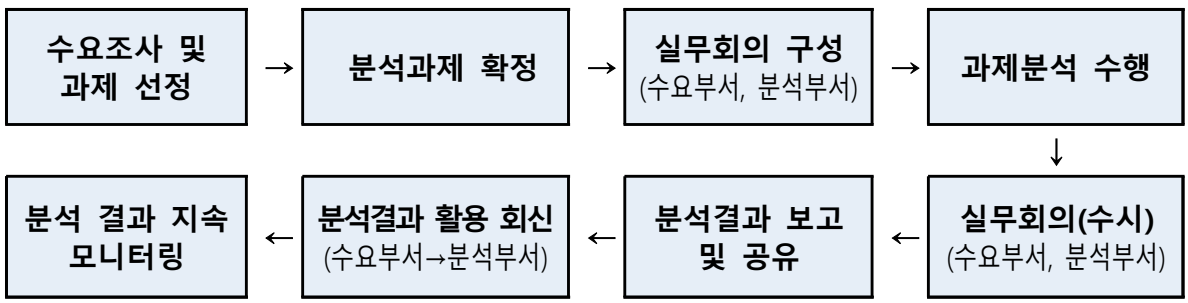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수행**

- 발굴대상: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 발굴기간: 정기 수요조사('25.8.) 및 수시 발굴
- 발굴분야: 시정 주요 현안 및 시민생활 밀접 분야
- 활용 데이터: 통신사(SKT) 유동인구 및 카드(신한) 소비 매출

  * 그 외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

- 추진절차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부서 성과평가 추진**

- 평가대상: 111개 부서(본청 88, 직속기관·사업소 등 23)
- 대상기간: 2026. 1. 1.~10. 31.

- 평가항목: 5개 항목(100점) / 정량평가

  * ①데이터·AI 역량 교육(25점), ②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20점), ③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20점), ④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20점), ⑤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15점)

- 추진일정: 계획 수립 및 부서 안내('26.3.) → 실적 취합 및 평가('26.11.) →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26.12.)

- 인센티브: 우수부서 포상금 및 유공자 표창 수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수행(12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1회)

○ 기대효과

- 경험·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정책 수립의 정확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데이터기반행정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통한 조직 전반의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

□ '26년 소요예산

○ 민간 데이터(통신사, 카드사) 구입 : 180,000천원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평가 우수부서 포상 : 3,000천원

□ 추진일정

○ '26년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 검토 : '25. 8.~'26. 1.

○ 시정현안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 수시

○ 민간 데이터(통신사, 카드사) 구입 용역 체결 : '26. 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평가 계획 수립 : '26. 3.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평가 완료 및 우수부서 포상 : '26. 1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1-1 AI·디지털 시대를 주도 할 행정역량 강화

주관부서	인재교육원	협조기관/부서	
담당자	창의교육기획팀	연락처	062-613-7035

□ 추진배경

○ AI·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행정 역량 강화 필요

- AI 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 및 시 정책 방향의 이해도 제고 및 디지털 기반 행정 대응력 확보

○ 행정서비스 고도화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AI 활용 역량 중요성 증대

-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책 품질 향상
- AI 기반 혁신 인재 육성을 통해 조직 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 대응 필요

- AI 활용 범위 확대 등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응한 체계적 행정역량 교육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AI 관련 교육 과정 개편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 AI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 2025. 11. 조선대학교 AI.SW 교육센터,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대비 역량 강화

초급(3과정)	⇒	중급(3과정)	⇒	고급(2과정 신설)
AI와 미래행정 ChatGPT 활용첫걸음 빅데이터활용 행정혁신		데이터 기획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AI 이미지 제작과 편집		AI 활용한 파이썬으로 행정데이터 분석 생성형AI와 엑셀기반 업무자동화

* 단계별 교육과정 세부 내용

구분	목표	과정	학습성과
초급	AI·데이터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행정 업무 활용 인식 제고	(1차) ▶AI와 미래행정 ▶ChatGPT 활용 첫걸음 (2차) ▶빅데이터 활용 행정혁신	AI·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이해 단순 반복 업무에 생성형 AI 활용 가능 수준 도달
중급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및 분석·시각화 실무 역량 강화	(1차) ▶데이터 기획 (2차)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AI 이미지 제작과 편집	정책·사업 기획 시 데이터 활용 능력 확보 분석 결과를 보고서·자료로 효과적으로 표현 가능
고급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업무 자동화를 통한 행정 혁신 주도	1차(고급 분석 역량 확보) AI 활용 파이썬 기반 행정데이터 분석 2차(업무 자동화 적용) 생성형 AI와 엑셀 기반 업무자동화	대용량 행정데이터 분석 및 자동 처리 가능 부서 단위 업무 효율화 모델 제시 및 확산
관리자 간부 공무원	AI·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조직 혁신 리더십 확보	권장 이수(선택형·압축형) AI와 미래행정 빅데이터 활용 행정혁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사례 중심)	AI·데이터 활용 정책 판단 역량 강화 부서·조직 단위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 교육과정 내 AI 활용 사례, 적용 교육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 디지털미래산업 이해 및 체험, SNS 활용 행정홍보, 엑셀 교육과정 등에 적용

(교육과정) 디지털 미래산업 이해 및 체험, 데이터기반 행정의 이해,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 SNS(동영상) 활용 행정홍보, 실무중심 엑셀활용, 미리캔버스&캔바 활용 프리젠테이션

○ 디지털 감수성 및 AI 윤리의식 제고 교육

- AI 활용 시 접근 관점, 윤리·책임 의식, 데이터 신뢰성 등 인문적 디지털 감수성 교육 병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AI·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한 전 직원 AI 리터러시 향상

-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 정책 및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무 중심 AI 활용 역량 강화

- 단계별·심화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교육 완성도 향상

○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확대

- AI 교육과정 및 운영 횟수 확대를 통한 직원 참여 기회 증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2025년 5과정 16회 442명 운영 • 획일적 교육 운영으로 개인별 역량 수준 반영 미흡	• 2026년 14과정 48회 1,095명으로 교육과정 확대 및 참여 기회 증대 • 단계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체계적 학습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강사비 및 운영비: 48,0000천원(1,000천원*48회)

11-2 AI 인재양성 성장사다리 구축

주관부서	AI반도체과	협조기관/부서	
담당자	인공지능산업팀	연락처	062-613-1224

□ 추진배경

○ 단계별 촘촘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으로 인재 중심의 선순환 자립형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지역기반 첨단인력 정주 체계 완성

- 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실무인재 까지 전주기 AI 인재 육성

□ 세부 추진사항

○ (중등교육) AI 영재학교 설립을 통한 조기 AI인재 발굴 및 양성

- 매년 50명 조기 AI인재 배출을 위한 AI영재학교 설립 추진

  * 2029년부터 매년 50명씩 전국의 AI영재 선발 및 교육 추진 계획

○ (AI 고급인재) 대학·대학원과 연계한 AI융합 고급인재 양성

- (대학)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인재양성, 첨단분야(AI) 부트캠프
- (대학원) AI대학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AI융합혁신인재양성

  * 지역 대학 및 대학원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AI 양성체계 구축

○ (AI 실무인재) 산업현장 수요 기반한 AI 실무인재 양성

-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AI융합아카데미

  * 이론 및 실무 프로젝트 교육, 기업매칭, 컨설팅, 특강, 취·창업 관리 등 전주기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별 교육수혜인원 산출 (AI고급 215명, AI실무 730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AI 전문인력 양성 부재 • 첨단분야 AI기업 인력 부족	• 지역 AI인재 양성 체계 완성 • 지역기반 AI인재 정주 체계 완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 제5조(기본계획)1항4호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제7조(인공지능기술 지원)4항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
- 제8조(인공지능융합 지원)3항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학협력"

□ '26년 소요예산

○ (AI인재양성 사다리) 총 사업비 228.7억원

- (중등교육) AI 영재학교 설립 건축예산 22억원
- (AI고급인재) 구글클라우드AI인재 1.6억, 인공지능대학원 46억, 지역지능화혁신 인재 25.3억, AI융합혁신 인재 15.8억
- (AI실무인재) 인공지능사관학교 103억, 지역ICT이노베이션 15억, AI융합아카데미(비예산)

□ 추진체계

○ 지역대학 및 지역기관

분야	사업별	관련기관(수행기관)
중등교육	AI 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AI 고급인재	구글클라우드AI인재양성 인공지능대학원 지역지능화혁신 인재양성 AI융합혁신 인재양성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AI 실무인재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지역ICT이노베이션확산 AI융합아카데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추진일정

○ (AI영재학교) 건축설계 발주('26.2월), 중간설계('26.6월), 실시설계('26.9.), 조달청 심의('26.12월)

○ (AI고급인재 양성) 교육생 모집(~'26.1분기), 교육·운영(~'26.12.)

□ 홍보계획

○ 인재양성 사업별 교육생 모집 홍보 추진(보도자료, 라디오 등)

○ 교육 수료식 및 성과확산 홍보(보도자료 등)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특강, 워크숍, 기업매칭, 취업박람회, 인턴십 매칭 등**

- 교육생 대상 특강, 유망기업 방문, 기업 매칭 일자리 연계, 박람회 참여 지원 등

□ 성과 홍보 방안

○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매칭**

- 취업박람회, 기업매칭 프로그램으로 산업(기업)과 교육생 연결
- 우수 졸업생 인터뷰 홈페이지 게시, 성공사례 영상제작 배포

Ⅲ.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부혁신) 과제

1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주관부서	기후대기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자치구
담당자	2045탄소중립팀	연락처	062-613-4311

□ 추진배경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피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 기후위기 적응시설 : 쿨루프, 쿨링포그, 그늘막, 폭염쉼터, 도로열선 등

□ 세부 추진사항

○ ’26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5. 7.

- 59개소, 1,736백만원

○ ’26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교부액 확정 : ’25.12.

- 56개소, 1,666백만원

○ ’26년 사업비 교부(자치구) : ’26. 3. ~ 4.

○ ’26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26. 3. ~ 12.

- 사업내용 : 쿨루프, 기후대응 쉼터, 도로 열선 등 설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기후 적응시설 설치 50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취약지역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 기후 적응시설 설치 등으로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666백만원(국비 833, 시비 416.5, 구비 416.5)

□ 추진체계

○ 시 : 공모신청, 사업비 교부(국비, 시비), 사업관리(총괄)

○ 자치구 : 사업비(구비) 확보, 사업추진, 시설물 사후관리

□ 추진일정

○ ’26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26. 3.~12.

○ ’27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대상지 발굴 : ’26. 3.~6.

○ ’27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심의 : ’26. 6.~7.

○ ’27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6. 7.

2 시청 결혼식장(빛의 정원) 운영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기관/부서	
담당자	후생복지팀	연락처	062-613-2881

□ 추진배경

○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시청 잔디광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

○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웨딩에서 벗어나 **"나만의 예식공간 차별화 및 실용적인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주말 및 공휴일)

○ 장　소 : 시청 실내·외

- **①야외광장(잔디밭), ②기념수 옆(동산), ③장미공원, ④1층 시민홀 등**

○ 시　간 : **주말 및 공휴일 1일 1예식**(주간만)

* 본 예식은 주간 11:00 ~ 18:00 사이에 운영

□ 세부 추진사항

1 신청 대상

❍ 대　상 : 예비부부 혹은 양가부모님 중 1인이 **거주자 및 생활권자**

- 거 주 자 : **광주시·전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 된 예비부부 또는 양가부모
- 생활권자 : **광주시·전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등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재직증명서 등 첨부)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수시 접수(1일 1예식으로 선착순 접수,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 공유누리 웹(www.eshare.go.kr) 또는 모바일 웹, 전화(062-613-2881) 및 방문 접수 등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선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생활권자) 등 각 1부

3 시 지원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 지원사항

- **장소(시설) 대여** : '대관료'는 무료, '사용료'는 실비수준 부과
  - ▸ 사용료 : 장소에 따른 **기본 사용료(야외 1만원, 실내 2시간당 1만원) + 냉난방 별도부과**
  - * 이용료 산출기준(광주광역시 청사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 규정 개정시 변경 가능
- **주차장 및 화장실 개방**, 시설·전기·집기 등 이용 편의 지원

② 이용자 준수사항

- 예식 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시설 등 **훼손시 배상처리**의 책임
- 실내·외 취사는 금지(실외 케이터링 허용)
- 하객식사로 구내식당 사용 시 사전에 보증금 형태로 기본 음식값의 10%(10만원) 납부
  - ※ 음식 재료비 등 준비 완료된 시점에 취소된 경우 손해 발생 방지
- 케이터링 또는 외부 음식 반입 등으로 인해 식중독 등 발생 시 책임의무 공지
- 하객 인원을 고려한 주차안내 전담요원 배치(150명 미만 1명, 150명 이상 최소 2명 이상)

4 식사 운영 : 신청자 자율적 선택

① 시 구내식당 활용 + 추가음식 반입(완성품 위주의 음식)

- 메뉴 : 국수 단품 제공, 가격 : 1인 5,000원(재료비)
  - * 국수(고명 : 애호박, 당근, 계란지단) + 기본반찬(김치, 단무지절임, 오이고추, 요플레)

② 케이터링(뷔페) 또는 답례품 제공(이용자 부담)

- 야외광장에서 가능(단, 1층 시민홀은 케이터링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빛의정원 결혼식 10쌍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청 잔디광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 •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비용으로 예산절감과 여유롭고 특별한 결혼식 기대	• 시청 잔디광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여 청사 내외부 유휴공간 이용 활성화에 기여 •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웨딩에서 벗어나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및 실용적인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방침결정

□ 추진일정

○ 빛의정원 홍보 및 결혼식 추진 : 연중

□ 홍보계획

○ 부서·유관기관 공문 발송 및 보도 자료 배포

○ 관련 포스터 및 홍보사항 홈페이지(시·사업소·자치구) 게시

3 찾아가는 '자녀방 정리' 컨설팅

주관부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협조기관/부서	
담당자	직장맘지원팀	연락처	062-613-7984

□ 추진배경

○ 자녀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여성의 경우, 가사 및 정리 부담으로 일생활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녀방 정리는 시간과 체력적 부담이 커 전문적인 정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문가 방문형 정리컨설팅을 통해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 광주광역시 거주 자녀돌봄 직장여성 대상 선착순 모집(12건)
* 남·녀 육아휴직자 포함, 돌봄 자녀의 범위는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 전문가 2인 1조가 가정 방문하여 자녀방 및 자녀용품 정리 수납 컨설팅 제공(3시간 이상)

◯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연도 계획 반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리컨설팅 12건 지원 완료
- 참여자 만족도 90% 이상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육아 및 직장생활 병행으로 정리 수납 관리 어려움 • 가사 부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정리 습관 형성 • 가사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6년 소요예산

○ 6,000천원 (시비100%)

* 정리컨설팅 지원 : 500천원*12건=6,000천원

□ 추진체계

○ 운영방법 : 지역 홈케어 정리컨설팅 전문업체 진행

○ 지원내용 : 2인 1조 전문가 직접 방문, 자녀방 및 자녀용품 정리 컨설팅(3시간 이상 진행)

○ 운영절차

상담 지원 신청	⇨	일정 확인 등	⇨	정리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
신청서 제출		시간 장소 등 일정 확인		전문가 방문 · 정리 (2인1조, 3시간)		정리 만족도 조사

□ 추진일정

◯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계획 수립 : '26. 2. 26.

◯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수행 업체 계약 : '26. 3. ~

◯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공고 및 모집 : '26. 3. ~

◯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사업 추진 : '26. 3. ~ 11.

◯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26. 12.

□ 홍보계획

○ 광주광역시청 및 본부 홈페이지 게시

○ 보도자료 배포 및 관계기관 홍보 협조 요청 등

4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서) 협업체계 구축

주관부서	안전정책관	협조기관/부서	자치구 안전부서, 광주경찰청(서)
담당자	안전총괄팀	연락처	062-613-4923

□ 추진배경

○ 경찰 -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절차 미비

○ 재난·사고·범죄 발생 시 피해자 정보 확보 어려움

○ 제도 미인지로 인한 보험금 청구 누락 발생

○ 행정안전부 - 경찰청 협약 기반 정보 공유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보험 가입정보 및 청구방법 안내를 통한 신속 지원 추진

○ 피해자 대상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동의서 수집 체계 마련

○ 광주경찰청 및 자치구 협업회의 개최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보험금 지급 결과, 상호 공유 체계 구축

○ 사건·사고 및 피해자 정보 표준서식 마련 및 공동 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안전보험 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수혜 대상 확대

- 재난·사고·범죄 발생 시 피해자 대상 신속 안내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피해자 정보 확보 어려움으로 보험 안내 누락 발생 • 제도 인지 부족으로 보험금 청구 미흡 및 지연 발생	• 동의 기반 정보 공유로 피해자 대상 신속 안내 체계 구축 • 청구 절차 안내로 보험금 지급 확대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26년 소요예산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350백만원, 홍보물 제작 1.1백만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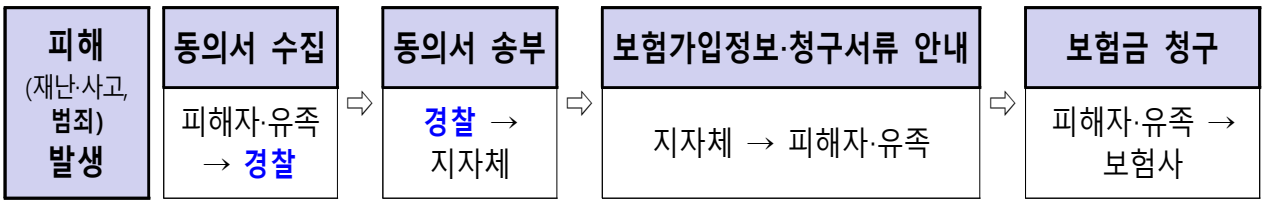
○ 행안부 : 협약 총괄,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 경찰청(서) : 피해자 안내 및 동의서 수집·정보 제공

○ 지자체 :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정보 및 청구방법 안내·지원 수행

○ 보험사 : 보험금 청구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업무 수행

< 지자체-경찰 정보 공유체계 >



□ 추진일정

○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경찰청(서) 협업회의 개최(3월)

○ 사건·사고 정보 표준서식 마련·배포(4월)

○ 시·구민안전보험 통합 홍보물 제작·배포 추진(4월)

○ 보험금 지급 결과(자치구 포함) 경찰청에 통보(매분기)

○ 지자체-경찰 협업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성과 공유(연말)

□ 홍보계획

○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시·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및 관계기관 배포 추진

○ 누리집 및 SNS, 방송 인터뷰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Ⅳ. 지방정부 혁신 확산 방안

□ 공직자 연구모임을 통한 교육 및 학습 활성화

○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연구·토론하는 공직문화 조성

- 소속·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시정 혁신을 위해 '연구동아리' 형태의 모임 활성화
- 팀별 월1회 이상 토론식 회의,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 자율학습 활동 전개
- 정책 추진시, 참여조건 완화 등 부담완화를 통해 직원 참여 유도 및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도출

※ 2026년 공직자 연구모임 총 7팀(43명) 선정 및 9개월간('26. 3. ~ 11.) 운영

○ 연구모임 참여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포상금 및 표창) 최종 발표회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4팀에 시장표창 수여 및 총800만원 규모 포상금 지급

* 대상(400만원), 금상(250만원), 은상(100만원), 동상(50만원)

- (교육실적 인정) 참여직원 1인당 상시학습 최대 30시간 인정
- (활동 지원)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비(총 예산 22,850천원 내) 지원

□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성과 홍보

○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SNS매체를 활용한 시민과 소식 공유

- (기간) 2026. 1. ~ 12.
- (매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내용) 카드뉴스, 카카오톡메시지, 포스팅, 릴스 영상 등 연 800건

○ 2026 광주광역시 소셜기자단 운영 및 현장취재 추진

- (기간) 2026. 3. ~ 12. * 모집 : 2026. 1. ~ 2. / 발대식 : 2026. 3.
- (인원) 40명
- (내용) 주요 시정현장을 직접 취재해 제작한 포스팅, 카드뉴스, 숏츠(릴스) 등 **월 평균 20건 게시**

*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61회 광주시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 **유튜브 특화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추진**

- (기간) 2026. 1. ~ 12.
- (내용) 롱폼·숏폼 등 월 2회 이상 기획영상 제작,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등

○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SNS 이벤트 추진**

- (기간) 2026. 1. ~ 12. / 월 1회
- (내용) SNS 채널 구독 이벤트, 주요 명소 인증샷 이벤트 등

□ 핵심정책 홍보기획 강화로 대시민 정책 체감 확산

○ **추진방향**

- 통합적 기획홍보로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체감도 향상
- 정책특성별 맞춤형 홍보지원 및 성과중심의 시민체감형 홍보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시정가치 중심의 통합 홍보기획 강화**

· 혁신과제 관련 홍보콘텐츠* 제작 시 시정 핵심가치를 관통하는 홍보 메시지를 설정, 일관된 톤앤매너를 유지함으로써 홍보 효율 극대화

* 언론보도(기획보도, 인터뷰, 기고, 보도자료 등), 온라인(SNS, 유튜브 등) 및 오프라인(현수막, 스티커, 랩핑 등) 홍보

· 자치구·유관기관과 홍보협의체 운영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수단 공동 활용하여 홍보시너지 창출

- **정책맞춤형 홍보컨설팅 및 로드맵 지원**

· 주요정책 기획 단계부터 정책수혜자 맞춤형 디자인, 스토리텔링, 공간브랜딩 등 홍보 아이디어 제공

· 중장기시책 및 대형사업의 경우 정책특성·고객에 맞춰 부서 홍보 로드맵 수립 지원

- **성과현장 중심 홍보 및 시민참여형 기획홍보 추진**

· 정책브랜드 확산 전략* 통해 성과중심 홍보 기획 및 운영

* 정책성과 현장에 정책브랜드 적극 노출, 정책브랜드 적용 온·오프라인 홍보물(굿즈 등) 개발·제작·배포 및 행사장 팝업스토어 운영 등 대시민 정책인지도 제고

· 주요 시정 이슈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기획행사, 홍보역량 강화 워크숍, 홍보성과 공유 행사 등 정책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 접점 확대